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VIP 리포트

- 스웨덴 패러독스의 성공 배경과 시사점
- 기업의 부담을 낮추는 세제와 규제

발행인 : 한 상 완
편집주간 : 김 동 열
편집위원 : 주 원, 백흥기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94
Tel (02)2072-6305 Fax (02)2072-6249
Homepage. <http://www.hri.co.kr>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본부(02-2072-6245)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스웨덴 패러독스의 성공 배경과 시사점 - 기업의 부담을 낮추는 세제와 규제

Executive Summary	i
1. 도입 : 강한 ‘복지 권리’, 약한 ‘조세 책임’	1
2. 스웨덴 패러독스와 7가지 성공 배경	3
3. 시사점	12

< 요약 >

■ 도입 : 강한 '복지 권리', 약한 '조세 책임'

2015년 현재 우리 국민들은 복지에 대한 권리는 강하지만, 복지를 위해 필요한 조세와 재정의 책임 의식은 강하지 않은 바, 복지-재정-성장의 선순환에 성공했던 스웨덴 사례를 분석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 스웨덴 패러독스와 7가지 성공 배경

(스웨덴 패러독스) 스웨덴은 높은 조세부담과 높은 복지지출 비중에도 불구하고, 세계 5위의 높은 국가경쟁력을 유지함으로써 '복지-재정-성장'의 선순환이 가능함(스웨덴 패러독스)을 보여주고 있다.

(7가지 성공 배경) 스웨덴 패러독스의 성공 배경은 다음 7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 ①(기초체력) 첨단산업에서의 높은 경쟁력과 경상수지 흑자 등 스웨덴 경제의 강한 기초체력은 고복지-고부담-고성장 모델을 뒷받침하는 가장 큰 자산이 되고 있다.
- ②(인구/고용) 저출산에 따른 인구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여 합계출산율이 1.9로 높고, 75%에 달하는 높은 고용률로 스웨덴의 경제활력 유지에 성공하고 있다.
- ③(개인소득세) 과거 개인소득세 비중이 전체 세수의 50%에 근접했으나 현재는 29%로 크게 낮아졌지만 여전히 타 선진국 대비 높은 편에 속하며, 이처럼 개인들의 높은 '조세 책임'이 복지국가의 토대를 튼튼히 하고 있다.
- ④(법인소득세) 낮고 단일한 법인세율로 인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법인관련 세수의 비중도 낮은 편이며, 스웨덴 기업들의 높은 국제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초를 뒷받침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법인세수 비중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
- ⑤(재정개혁) 1970년대 석유위기와 1990년대 금융위기 등 수차례의 외부충격에 적응하기 위한 연금개혁과 복지 구조조정 등 개혁을 통해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 ⑥(기업규제) '기업경영에 대한 간섭'이나 '가격규제'의 수준은 선진국 중 가장 약한 편에 속함으로써, 스웨덴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자유롭게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친기업적 경영환경'이 제공되고 있다.
- ⑦(투명성과 신뢰) 부패지수와 사회자본에 있어서 스웨덴은 세계 5위 이내에 속하며,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과 정보 공개는 물론 '내가 낸 세금이 나의 복지 혜택으로 돌아온다'는 '복지 경험'을 바탕으로 조세 저항이 크지 않다.

■ 시사점 : (1)'친기업적' 세정과 규제개혁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2)투명한 행정과 신뢰를 기초로 국민들의 '조세 책임' 의식을 고취하며, (3)세원의 확충과 '투자형 복지지출' 확대를 통해 '재정의 체질'을 강화한다면, 복지-재정-성장의 선순환 속에서 우리도 중부담-중복지 모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1. 도입 : 강한 '복지 권리', 약한 '조세 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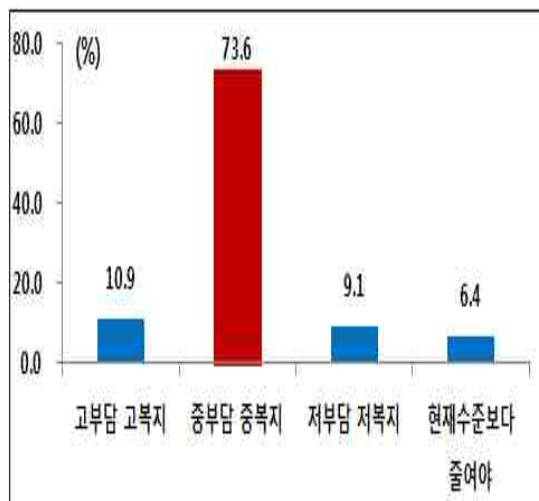
○ 현재의 낮은 복지수준에서 더 나아가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서, 우리 국민들의 '복지 권리'는 강한 편임을 알 수 있음

- "바람직한 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해 전문가 111명에게 질문한 결과, '중부담-중복지'라는 응답이 73.6%로서 압도적이었고, '고부담-고복지' 10.9%, '저부담-저복지' 9.1%로 응답함
- 현재의 '저부담-저복지' 모델에 만족하지 못하고, 점진적으로 '중부담-중복지' 모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며, '복지에 대한 권리'는 강한 편으로 드러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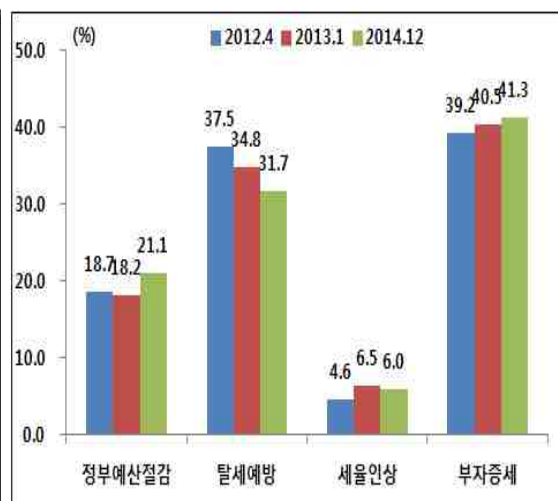
○ 반면,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OECD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세금부담과 세율인상에 대한 저항이 강하여 '조세 책임'은 약한 편임

- 2012년 현재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2%,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26.8%로서 OECD평균 조세부담률 26.1%, 국민부담률 35.4%에 크게 미달
- 이처럼 조세부담이 선진국 평균에 크게 미달할 정도로 낮은 상황이지만, 2013년과 2014년 조세부담률이 2년 연속 하락했다는 추계 결과가 제시된바 있어서, 향후 복지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에 빨간 불이 켜져 있는 상황임

< 바람직한 복지정책 방향 >



< 복지 재원 조달 방안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2015.3).
주 : 전문가 111명에게 '바람직한 복지정책'을 질문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주 : 20세 이상 성인, 1천명 내외, 전화설문.

- 일반인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통해 2012년부터 2013년, 2014년 3회에 걸쳐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물어본 결과, '세율 인상'의 응답률은 각각 4.6%, 6.5%, 6.0%에 불과하여 '조세 저항'이 상당함을 알 수 있음
 - 특히 본인에게 세금부담이 돌아오는 '세율인상'에 대해서는 6%내외의 가장 낮은 응답률을 기록하고 있어서,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은 가장 나중에, 최소로 하고 싶다'는 뉘프(NOOMP, Not Out Of My Pocket)현상¹⁾이 여전함
- '고부담-고복지' 모델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쟁력 역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스웨덴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 경제가 '복지-재정-성장의 선순환'을 이룩함은 물론 복지재정을 확보함에 있어 시사점을 얻고자 함
 - 고부담-고복지에도 불구하고 높은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스웨덴을 두고 '스웨덴 패러독스'²⁾라고 불렀는데, 이처럼 '복지-재정-성장의 선순환'에 성공한 배경을 살펴보고, 우리 경제에 주는 시사점을 얻고자 함
 - 2013년 현재 스웨덴은 43%의 높은 국민부담률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국민들의 조세저항은 심하지 않음
 - 스웨덴이 고부담-고복지에도 불구하고 높은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배경을 다음 7가지로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 스웨덴 패러독스의 7가지 성공 배경 (분석의 틀) >

대분류	중분류	세부 지표 및 내용
경제	① 기초체력	EU 경제혁신지수, 경상수지(GDP비중)
	② 인구/고용	합계출산율, 고용율
↓	↓	↓
재정	③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 비중, 소득세 면세자 비중
	④ 법인소득세	자본의 조세부담률, 법인관련 세수의 비중
	⑤ 재정 개혁	1990년대 연금개혁, 복지지출비율 등
↓	↓	↓
정치·행정	⑥ 기업 규제	OECD 상품시장규제(PMR) 중 기업관련 규제
	⑦ 투명성과 신뢰	투명성(부패인식) 지수, 사회자본 지수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1) 뉘프에 대해서는 '현대경제연구원, '복지의식의 이중성과 뉘프현상', 경제주평 12-12, 2012.4.2'을 참조.
 2) '유모토 켄지' & '사토 요시히로'의 『스웨덴 패러독스』(2011, 김영사)에서는 스웨덴 경쟁력의 5가지 비결을 제시. (1)협력적 노사관계, (2) 높은 교육수준, (3)IT인프라, (4)R&D투자와 산관학연계, (5)세계 인센티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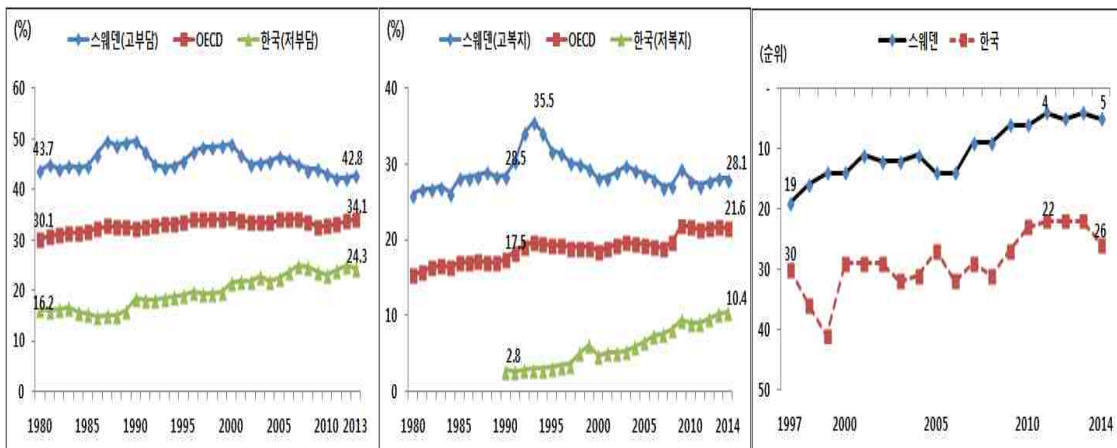
2. 스웨덴 패러독스와 7가지 성공 배경

(1) 스웨덴 패러독스의 개념과 현황

○ (스웨덴 패러독스) 高부담, 高복지 하에서도 높은 국가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복지-재정-성장의 선순환'을 구현하는 것을 '스웨덴 패러독스'라고 부름

- 스웨덴은 2013년 현재 국민부담률(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의 GDP 비중)이 42.8%로서 덴마크, 핀란드 등과 함께 조세부담이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함
 - OECD 회원국 평균은 34.1%이며, 한국은 24.3%로서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침은 물론 회원국 중에서 조세부담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함
- 스웨덴은 2014년 현재 복지지출비중(공공복지지출의 GDP 비중)이 28.1%로서 덴마크, 핀란드 등과 함께 복지지출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함
 - OECD 회원국 평균은 21.6%이며, 한국은 10.4%로서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침은 물론 회원국 중에서 복지지출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함
- 스웨덴은 2014년 현재 IMD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세계 5위로서 상위권에 속하며 지난 1997년의 19위에서 지속적으로 순위가 상승하였음
 - 반면,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2014년 26위로서 2013년(22위)에 비해 4계 단 하락했고, 1997년의 30위, 2008년의 31위에 비해 크게 향상되지 못함
 - 스웨덴은 '高부담-高복지-高경쟁력'의 황금삼각형(golden triangle)이 가능함을 보여준 반면, 한국은 '低부담-低복지-低경쟁력'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음

<스웨덴의 높은 국민부담률> <스웨덴의 높은 복지지출비중> <스웨덴의 높은 국가경쟁력>



자료 : OECD.stat.

주 : 국민부담률(조세+사회보장)/GDP.

자료 : OECD.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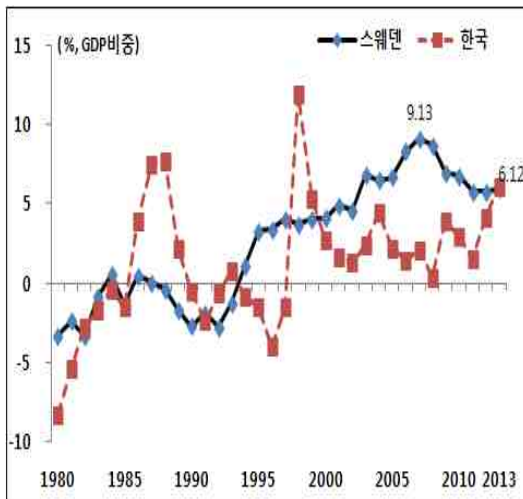
자료 : IMD, 국가경쟁력순위.

주 : IMD의 순위는 2007년부터 제공됨

(2) 스웨덴 패러독스의 7가지 성공 배경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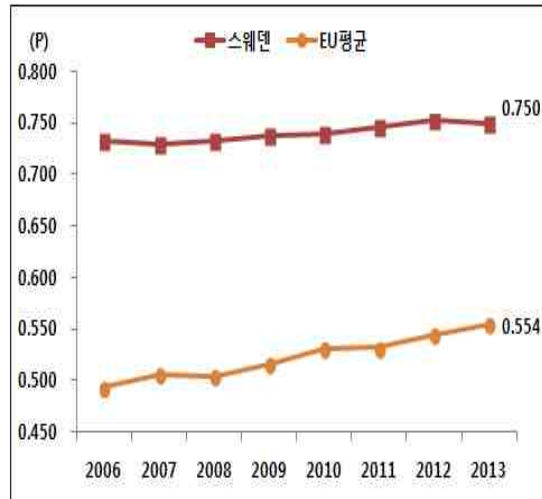
- (①기초체력) 스웨덴은 자동차, 통신, 디자인 등 첨단산업에서의 강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는 등 스웨덴 경제의 강한 기초체력(펀더멘털, fundamental)이 고복지-고부담-고성장 모델을 이끌고 있음
- 스웨덴은 유럽에서 스위스, 독일 등과 첨단산업 경쟁력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1990년대 중반이후 경상수지 흑자 규모와 GDP 대비 비중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음
 - GDP대비 경상수지 비중은 1.1%(‘94)에서 9.1%(‘07), 6.0%(‘13)로 꾸준히 상승했으며, 흑자 규모도 24억 달러(‘94)에서 345억 달러(‘13)로 크게 증가
 - 한국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외부 경기변화에 따른 변동폭이 크다는 점에 주목
- 스웨덴은 인적 자원과 연구개발, 지적 재산권 등을 포함하는 EU의 경제혁신지수(Innovation Union Scoreboard)에서 스위스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음
 - 2006년 이후 계속해서 스위스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1점 만점에 0.75점으로 절대값 역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스웨덴의 높은 경상수지 흑자 >



자료 : IMF, World Bank.
 주 : 1) GDP 대비 경상수지 비중.
 2) 2010년까지는 IMF, 2011년 이후는 WB 자료.

< 스웨덴의 높은 경제혁신지수 >



자료 : EC, 'Innovation Union Scoreboard 2014'.
 주 : 1) EU 34개국 중 스웨덴은 스위스에 이어 2위.
 2) IUS는 인적자원, R&D 투자, 지적재산, 기업가 정신, 혁신적 기업, 경제적 효과 등을 종합평가
 3) 0에서 1로 높을수록 혁신성이 높게 평가됨

3) 7가지 성공 배경의 분류 기준 등 분석 틀은 본문 2쪽의 <표>를 참조.

○ (②인구/고용) 스웨덴은 한 때 유럽국가 중 최저출산율이라는 인구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현재는 합계출산율 1.9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75%에 달하는 높은 고용률 또한 스웨덴의 경제활력 유지에 기여

- 스웨덴은 1930년대, 1980년 전후, 2000년 전후 출산율 하락의 위기를 극복하고 2013년 현재 합계출산율 1.9로서 OECD 선진국 중 높은 편에 속함

· 스웨덴의 출산율은 1965년 2.39에서 한때 1.5까지 하락하였으나 2013년 현재 1.9 수준으로 다시 상승함. 높은 '가족' 복지지출도 영향을 미쳤을 것임.

(※가족(family)복지지출의 GDP비중: 스웨덴 3.6%(2011), OECD 22%(2011), 한국 1.1%(2012))

· 한국은 1950년 6.25전쟁 이후 베이비붐 시기에 합계출산율이 6까지 올라갔으나, 2013년 현재 1.2정도로써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편에 속함

(※한국 합계출산율: 1965년 5.16 → 2000년 1.41 → 2013년 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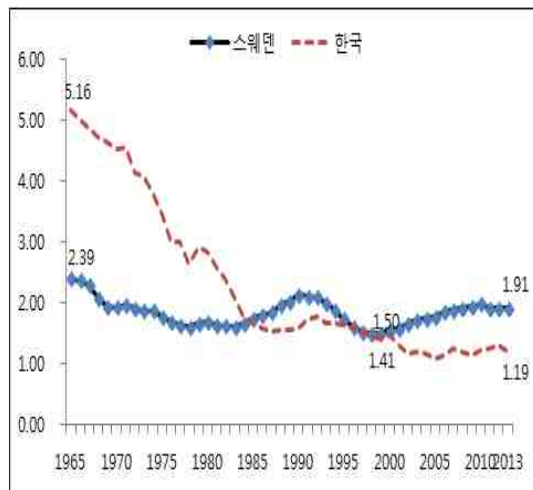
- 이에 따라 스웨덴의 15세 미만 인구 비중이 한국보다 더 높아졌으며, 고용률도 스웨덴은 75%인데 반해 한국은 65% 수준에 그치고 있음

· 15세 미만 인구의 비중이 스웨덴은 1990년 17.9%에서 2012년 16.8%로 소폭 하락했으나, 한국은 1990년 25.6%에서 2013년 14.7%로 크게 하락했으며,

이에 따라 스웨덴의 15세 미만 인구 비중이 한국을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

· 스웨덴의 고용률과 여성 고용률은 2013년 현재 각각 74%, 73%수준으로 선진국 중 높은 편에 속하며, 한국은 10%p 이상의 큰 격차로써 뒤처져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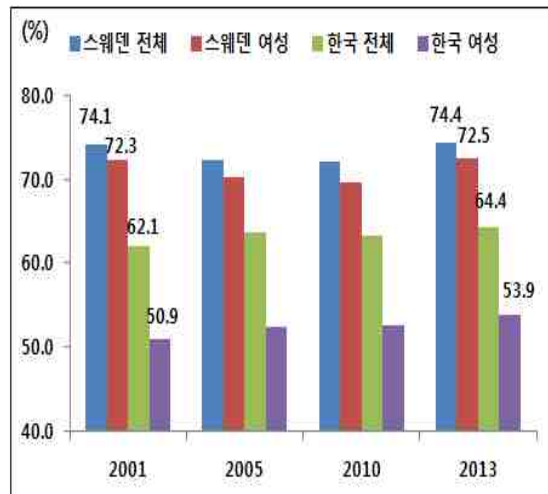
< 스웨덴의 높은 합계출산율 >



자료 : World Bank.data.

주 : 합계출산율.

< 스웨덴의 높은 고용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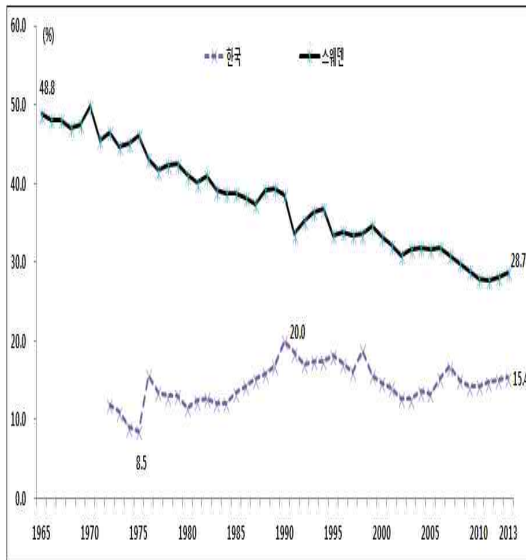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OECD.

주 : 고용률=생산가능인구(15~64세) 중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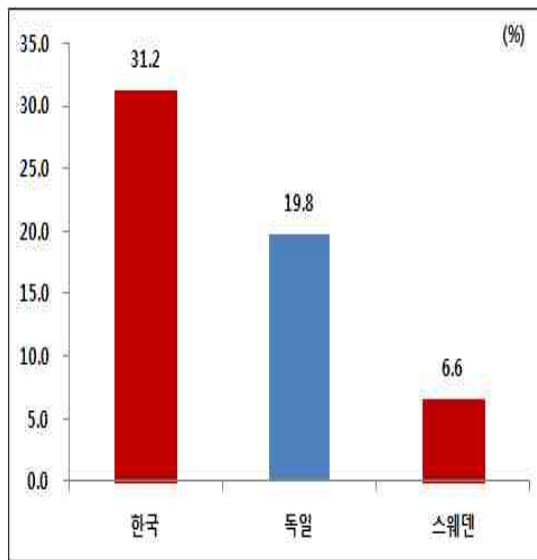
- (③개인소득세) 과거 50%를 차지했던 개인소득세 비중이 현재는 29%정도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선진국 대비 높은 편이고, 소득세 면세자 비중은 가장 낮아서, 이처럼 높은 '조세 책임'이 복지국가의 토대를 이룸
- 개인소득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스웨덴의 경우 1960년대에 50%에 근접했으나 최근에는 29%정도로 내려왔으며,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에 있음⁴⁾
 - 개인소득세의 총세수 비중은 영국과 독일도 각각 28%, 26% 수준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며, 상대적으로 한국은 15.4%로서 낮은 편에 속함
 - 개인소득세의 GDP 비중도 스웨덴이 12.3%로서 미국 9.8%, 독일 9.6%, 일본 5.6%, 한국 3.7%에 비해 크게 높은 편임 (OECD, 2013년 기준)
- 개인소득세 면세자 비중을 보면 스웨덴은 6.6%미만⁵⁾으로 가장 낮고, 선진국은 대부분 20%내외지만, 한국은 2013년 현재 31.2%로 크게 높은 편임
 - 2012년 기준 일본 15.8%, 독일 19.8%, 캐나다 22.6%

<스웨덴의 높은 개인소득세 비중>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주 : 개인소득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스웨덴의 낮은 '소득세 면세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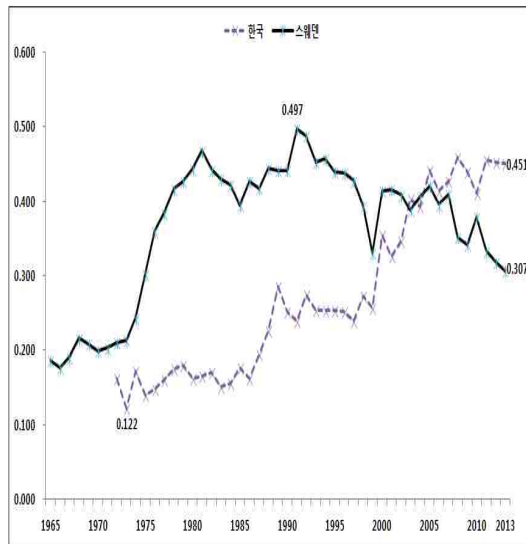
자료 : 국세청, OECD, 유모토 겐지·사토 요시히로(2011).
 주 : 1) 한국 등은 근로소득세, 스웨덴은 지방소득세
 2) 한국 2013년, 스웨덴 2007년, 독일 2012년

4) 한편, 소비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스웨덴의 경우 30% 선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어서, 과거에 비하면 소비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법인세나 개인소득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커졌음.
 5) 2007년 기준으로 스웨덴에서 '지방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는 18세 이상 주민의 비율은 6.6%에 그침(유모토 겐지·사토 요시히로, '스웨덴 패러독스', 2011, 253쪽 참조).

○ (④법인소득세) 1970년대 후반의 석유위기와 1990년대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스웨덴은 기업에 대한 세금부담을 크게 낮췄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활력과 경제성장을 촉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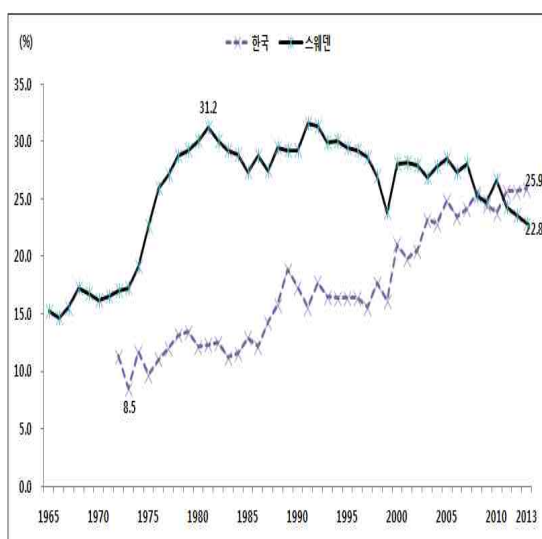
- 자본의 조세부담률⁶⁾(법인세+고용주 부담의 사회보장세)/(개인소득세+피고용인 부담의 사회보장세+소비세)은 스웨덴의 경우 1990년 이후 크게 하락하고 있어서 기업에 대한 세금부담이 줄고 있음을 보여줌
 - 스웨덴의 경우 '자본의 조세부담률'이 '90년 이후 0.50에서 0.31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 같은 '자본의 조세부담률' 하락은 반대로 '노동의 조세부담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본의 조세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짐을 의미
 - 반면, 한국은 '자본의 조세부담률'이 계속해서 0.12에서 0.45로 右上向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스웨덴에 비해서도 더 높아지는 역전 현상을 보임
- 법인관련 세수(법인세+고용주 부담의 사회보장세)의 총세수 中 비중도 '자본의 조세부담률'과 비슷한 추세로, 스웨덴은 1981년 31.2%에서 2013년 22.8%로 하락한 반면, 한국은 1973년 8.5%에서 2013년 25.9%로 계속 상승

<낮아진 스웨덴의 '자본의 조세부담률' >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주 : (법인소득세+사용자 사회보장기여금)/(개인소득세+피고용자 사회보장기여금+소비세+급여세).

<낮아진 스웨덴의 '법인관련 세수비중' >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주 : '법인소득세+사용자 사회보장기여금'의 합계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6) '자본의 조세부담률'은 위블스와 아르케(Wibbles and Arce, 2003)의 연구에서 활용된 분석 모델을 참고함. 자본의 조세부담률이 1이면 자본과 노동의 세금 부담이 동일하고, 1에서 0으로 내려가면 '노동'측 부담이 커지고, 반대로 0에서 1로 커지면 '자본'측 부담이 커지며, 1보다 크면 '자본'의 부담이 '노동'보다 더 큼을 의미.

○ (⑤재정 개혁) 스웨덴의 1990년대 초반 재정개혁을 ‘세기의 개혁’이라고 부를 정도로 획기적이었으며, ‘스웨덴 모델’에 대한 우려를 낳았지만, 여전히 고복지-고부담 모델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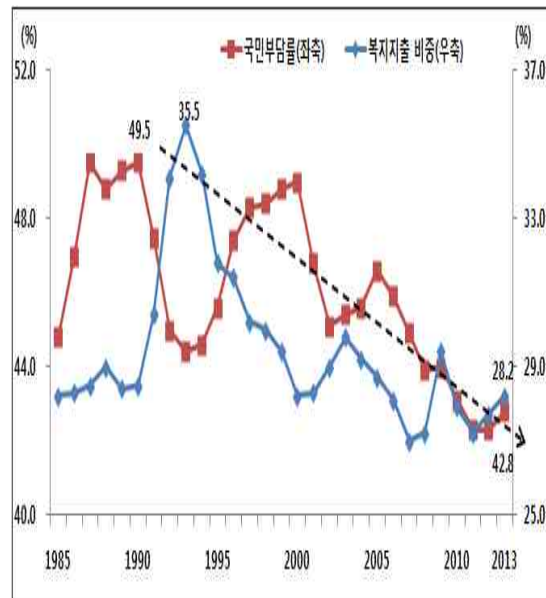
- 스웨덴은 국내 금융위기가 일단락된 1993년 이후 사회복지 감축, 공기업 민영화, 연금개혁 등을 통해 1990년대 후반 이후 건전재정을 달성함
 - 통신, 우편, 철도, 석유 등 주요 기간산업을 담당하던 35개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여 정부의 재정수입 확충과 공기업의 경영효율화를 달성
 - 재정수지 목표를 ‘GDP 2% 흑자’로 상향 조정하고 다년도 예산계획을 하향식(top-down)으로 수립하며, 정부지출에 상한을 도입하는 등 재정개혁을 추진
- 스웨덴은 1990년대 초반 금융위기와 그에 따른 과감한 재정개혁은 국민들의 복지혜택을 줄이고 그에 따른 재정지출의 부담을 줄였으며, 나아가 GDP대비 국민부담률도 낮추는 효과를 거둠
 - 스웨덴의 복지지출 비중은 1993년 35.5%를 정점으로 낮아져 2013년 28.2%를 기록했으며, 1990년 49.5%에 달했던 국민부담률은 2013년 42.8%로 하락

< 스웨덴의 1998년 연금개혁 >

분야	내용
급여 수준	소득비례연금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은 감소되도록 설계
평균 보수	15년 최고소득 구간에서 평생소득 구간으로 하향 조정
물가 연동	경제성장률이 기준을 미달하면 물가연동 기준이 낮아지도록 함
수급 연령	수급개시 연령의 지연을 위해 급여지급 비율을 차등화 (즉, 61세 72%, 65세 100%, 70세 157%)
보험료율	근로자 기여율 대폭 인상 (즉, 1% → 9.25%)

자료 : 전주성 외 (2001) 참고로 재작성.

<스웨덴 재정개혁에 따른 지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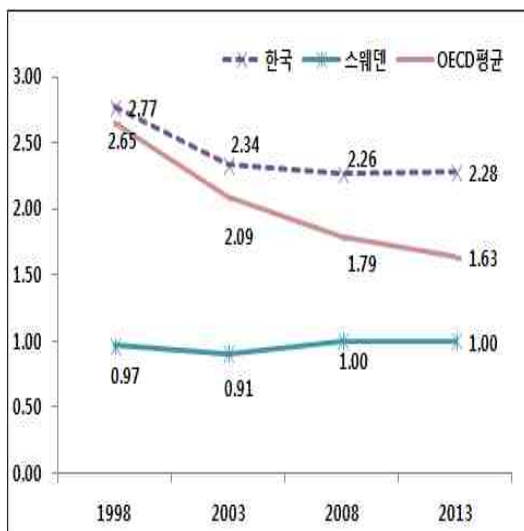


자료 : OECD.stat.

7) ‘필요한 만큼 지급하는 제도’(확정급부형; DB형)에서 ‘기여한 만큼 지급하는 제도’(확정기여형; DC형)로 대전환함으로써, 부담금(사회보장세)을 올리지 않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한 성공사례로 자주 인용됨.
 8) ‘남·북유럽의 재정건전성 차별화 요인’(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10-18(통권 398호), 2010.05.07)을 참조.
 9)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예산법’(State Budget Act)을 1996년도에 제정하여, 1997년부터 시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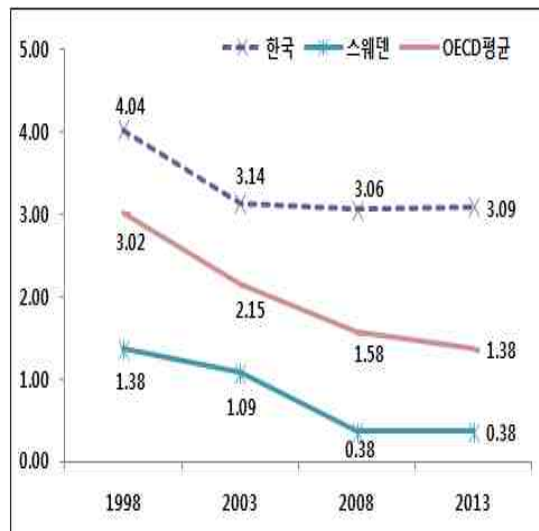
- (⑥기업규제) 기업의 경영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OECD 선진국 가운데 가장 부담이 적은 수준으로써,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친기업적인 규제정책을 펼치고 있음
- 스웨덴의 '기업경영간섭'과 관련된 규제 수준을 보면, OECD 선진국 가운데 가장 약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가격규제'의 수준은 절대적으로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장 약하다고 평가되고 있음
 - OECD에서 5년마다 발표하는 상품시장규제(PMR) 데이터를 보면, 그 하부 구성요소로서 '기업경영간섭'과 관련된 규제가 들어있는데, 스웨덴의 경우 '기업경영' 관련된 규제 수준이 선진국 중 매우 낮은 편에 속함
 - '기업경영간섭'과 관련된 세부 항목 가운데 '가격규제' 관련 규제의 수준을 보면 선진국 가운데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임
- 반면, 한국의 경우 '기업경영간섭'과 관련된 규제 수준도 스웨덴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나며, 특히 '가격규제'는 스웨덴에 비해 8배 이상 높게 나타나 기업의 자율권이 크게 제약받고 있음
 - '기업경영간섭'의 경우 한국은 2.28임에 비해 스웨덴은 1.00으로 매우 낮으며, '가격규제'의 경우 한국은 3.09임에 비해 스웨덴은 0.38에 그침

<스웨덴의 약한 '기업경영 규제' >



자료 : OECD, 상품시장규제(PMR) 데이터.
 주 : 1) PMR규제 중 '기업경영간섭' 관련 규제의 수치
 2) 6점 만점 점수가 높을수록 규제가 강함

<스웨덴의 약한 '가격 규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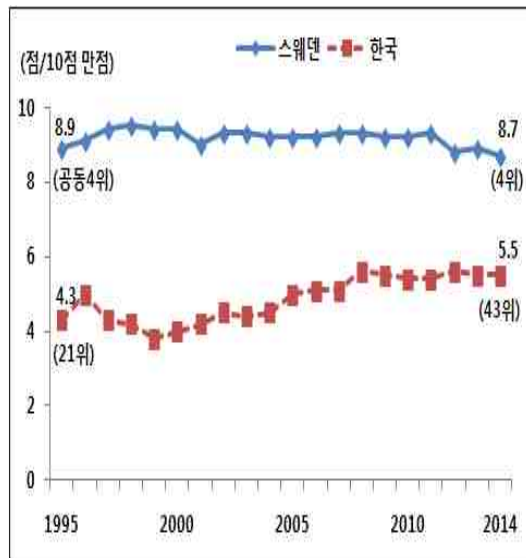


자료 : OECD, 상품시장규제(PMR) 데이터.
 주 : 1) PMR규제 중 '가격규제'의 수치.
 2) 6점 만점 점수가 높을수록 규제가 강함

○ (⑦정부 투명성과 신뢰)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고, 자신의 세금이 자신의 복지혜택으로 돌아온다는 믿음 때문에 고부담-고복지의 복지국가 구현이 가능했으며, 낮은 부패는 경제성장에도 긍정적으로 기여¹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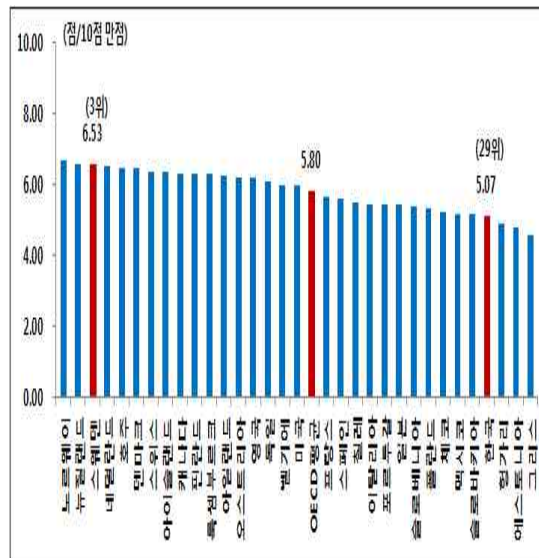
- 스웨덴은 국제투명성기구가 1995년 이후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 순위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4년에도 175개국 중 4위를 기록
 -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책을 집행하며, 예산이 낭비되지 않으며, 세금이 복지혜택으로 돌아올 것을 믿기 때문에, 정부에서 세금을 인상하더라도 기꺼이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고부담-고복지의 복지국가 구현이 가능했음
 - 또한, 부패는 경제성장률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¹¹⁾을 미치며,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은 스웨덴의 높은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짐
 -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5.5점으로 전체 43위에 그쳐 개선의 여지가 큼
- 신뢰, 배려, 참여 등으로 구성되는 사회자본의 경우에도 스웨덴은 세계 3위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은 29위에 그치고 있음

< 스웨덴의 높은 투명성/낮은 부패 >



자료 : 국제투명성기구(TI), 부패인식지수(CPI).
 주 : 10점 만점. 높을수록 투명하고 청렴. 2014년은 전체 175개 국가 중 순위.

< 스웨덴의 높은 사회자본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2014).
 주 : 10점 만점. OECD 국가 중 순위.

10) 현대경제연구원(‘부패와 경제성장’, 경제주평12-18, 2012.5.25)에 따르면, 한국의 청렴도가 OECD 평균 수준만큼 개선되면 한국의 2010년 기준 1인당 명목 GDP는 연평균 약 138.5 달러, 경제성장률은 명목기준으로 연평균 0.65%p 정도 추가 상승할 것이라고 실증 분석.

11) 아울러, Knack & Keefer(1995), Li(2000), Rock & Bonnett(2004) 등은 부패가 투자 하락을 유발해 경제 성장을 저해하거나, 직접적으로 부패와 성장 간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

○ (종합평가) 스웨덴 모델의 핵심으로 알려진 노사정 대타협, 연대임금제 등은 시대에 맞게 변화¹²⁾해 왔으며, 경제의 강한 기초체력, 기업하기 좋은 환경, 강력한 재정 개혁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모델'을 구현

- 스웨덴은 산학연 협력 등 효율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경제혁신지수를 높게 유지하고 경상수지 흑자와 합계출산율, 고용률을 높게 유지하는 등 강한 기초체력을 토대로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는데 성공했음

- 자본의 조세부담률을 낮춤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가격규제 등 기업 경영과 관련 규제의 혁신 등이 스웨덴 경제의 활력을 높여줌
- 1990년대의 강력한 재정 개혁은 복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게 해줌
- 정치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높은 세율'에도 불구하고 '조세 저항'은 높지 않게 유지할 수 있었음

< 종합평가 결과 : 스웨덴 패러독스의 7가지 성공 배경 >

대분류	중분류 지표 분석 결과	세부 지표 분석 결과
경제	① 강한 기초체력	높은 경제혁신지수 높은 경상수지 흑자 비중
	② 튼튼한 인구/고용 구조	높은 합계출산율 높은 고용률
↕	↕	↕
재정	③ 높은 개인소득세 비중	높은 개인소득세 비중, 낮은 소득세 면세자 비중
	④ 낮은 법인소득세 비중	낮은 '자본의 조세부담률' 낮은 법인관련 세수 비중
	⑤ 강력한 재정 개혁 (지속가능한 복지 모델)	1990년대 강력한 연금개혁 복지지출의 GDP비중 하락
↕	↕	↕
정치· 행정	⑥ 약한 기업규제	약한 기업경영 관련 규제 약한 가격 관련 규제
	⑦ 높은 투명성과 신뢰	높은 투명성 (부패인식지수 4위) 높은 사회자본 (사회자본지수 3위)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12) 스웨덴 모델의 핵심으로 알려진 1938년의 **찰츠요바덴협약**(스웨덴 노총(LO)과 사용자연맹(SAF)가 체결한 협약으로 노조는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하고 임금협상을 산별노조와 중앙교섭으로 단일화하는 대신, 사용자연맹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 1951년의 **랜-마이드너모델**과 **'연대임금제'**(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하에 대기업 임금은 동결하고 중소기업 임금은 인상함으로써,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중 임금인상을 감내할 수 없는 한계기업의 퇴출과 산업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등 완전고용을 목표로 노력함), 1976년의 **임노동자기금법**(매년 기업 이윤의 20%를 임노동자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함으로써, 이 기금을 통해 대기업들의 소유집중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으나, 기업들의 해외이전 위협 등 강력한 반발에 따라 법안 상정이 무산된 바 있음) 등은 2015년 현재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사회적 연대와 타협'**의 정신은 여전히 스웨덴 모델의 핵심 기둥으로 남아 있음.

3. 시사점 : 한국에서의 '복지-재정-성장' 연계모델 구현 방안

○(복지-재정-성장 연계모델) 강한 '복지 권리'에 비해 '조세 책임'은 약한 우리의 현실을 타개하고, '복지-재정-성장의 선순환'을 이룩하기 위한 비전의 제시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고령화¹³⁾, 복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다면, 복지지출과 조세부담을 높여가되 성장률 하락은 최소화하고 국가경쟁력은 높여가기 위한 스마트한 정책이 필요함
- 조세부담과 복지지출을 동시에 높이면서, 경제성장률 하락은 최소화하려면, 세율을 확충하면서 세율 인상은 최소화하며, 복지프로그램의 재편과 정부지출의 조정도 함께 추진하는 '정책조합(policy mix)'이 필요함

○(친기업적 세정과 규제개혁)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자본의 조세부담률'과 '법인관련 세수의 비중'이 낮아질수 있도록 친기업적 세정을 운영하고, 가격 등 기업경영 관련 규제는 대폭 완화하는 것이 필요함

- 우리의 지하경제 규모는 1993년 GDP의 27%까지 증가했다가 2007년 20%까지 하락¹⁴⁾했지만 선진국 수준(10%)으로 더 줄임으로써 추가 세수를 확보함
-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의 소득공제(세제 혜택) 확대¹⁵⁾, 자영업자의 '소득과 악률' 제고, '간이과세'의 적용 대상 최소화 등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조세저항 완화) 스웨덴은 고부담에도 불구하고 조세저항이 낮은 반면 우리는 저부담에도 불구하고 조세저항이 강한 편¹⁶⁾이므로, 투명한 행정과 정부 신뢰를 기초로 우리 국민들의 '조세 책임'을 고취하는 것이 시급함

-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행정정보의 공개와 주민참여 활성화, 예산집행의 투명성 강화' 등을 통해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내가 낸 세금이 복지라는 혜택으로 돌아온다는 '복지 체험'을 확산시켜야 함
- 최근 들어 자리 잡게 된 무상급식, 보육료 지원, 대학 학자금 지원, 기초연

13) 2010년 11%인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30년에 24.3%로 급등할 전망이며, OECD 평균과 비슷해짐.
 14)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현금영수증제도 시행, 고소득자 세무관리 강화 등으로 2005년 기준 민간소비지출(215조)의 약 75%(161조)가 과세인프라(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포착되는 것으로 분석됨.
 15) 박명호 외(2010.12)의 연구에 따르면, GDP 대비 카드 사용액이 1% 증가할 때 GDP 대비 지하경제 비중이 0.11~0.13% 정도 감소하며, 2006년 17.7%까지 감소했던 지하경제 비중이 2009년 19.2%로 소폭 반등함.
 16) 김동열, '복지의식의 이중성과 늪현상', 한국경제주평 12-12(통권 483호), 현대경제연구원, 2012.4.2 참조.

금 등의 '복지 체험'이 우리나라의 조세저항 완화에 크게 도움을 줄 것임

○(투자형 복지지출 확대) 직업 훈련·소개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LMP) 관련 지출과 보육, 육아휴직 등 가족(family)관련 복지지출의 비중을 늘리는 등 경제활력의 유지에 도움이 되는 '투자형 복지지출'¹⁷⁾을 확대

- 예를 들면 보육분야 지원 확대, 실업급여 보완, 직업훈련 강화를 위한 지출 등 사람에게 투자하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는¹⁸⁾ 복지지출은 강화
- 아동보육, 육아휴직 등과 관련된 가족(family)분야 복지지출은 2002년 GDP의 0.1%에서 2007년 GDP의 0.5%, 2012년 1.1%로 10년 만에 10배 이상 늘었으나, 2011년 OECD평균 2.2%, 스웨덴 3.6%에 크게 못 미침

○(정부예산 조정) 국민소득 2만 달러 시기를 기준으로 선진국 대비 지출 비중이 높은 경제사업을 점차 줄이고 복지분야 지출로 전환함

- 국민소득 2만달러 시기를 기준으로 정부지출 중 경제사업의 비중을 비교해보면 한국은 2007년 22.1%, 일본은 1996년 15.9%, 독일은 1991년 11.5%였으므로, 경제사업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복지지출의 비중을 늘림

경제연구본부 김동열 정책조사실장 (02-2072-6213, dykim@hri.co.kr)

17) 노동과 가족에 대한 복지지출은 중장기적으로 경제의 활력 유지에 도움이 되는 투자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
18) 직업훈련, 직업알선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LMP) 관련 지출이 높을수록 실업률은 낮고 소득격차는 완화 되는 것으로 나타남.

<별첨> 스웨덴과 한국의 주요 지표 비교

구 분	스웨덴	한국
인 구	970만 명	4,900만 명
평균연령	41.2세	40.2세
기대여명	81.9세	79.8세
인구증가율	0.79%	0.16%
합계출산율	1.88	1.25
초산모 평균연령	28.9세	30.3세
영아사망률	2.6	3.9
1000명당 의사	3.27명	2.14명
지니계수	0.23	0.31
노조조직률	68.4%	9.9%
상수도 보급률	100%	97.8%
교육비 GDP비중	7%	5%
평균교육기간	16년	17년
국내총생산(GDP)	\$559 (billion)	\$1,449 (billion)
1인당GDP(구매력기준)	\$44,700	\$35,400
GDP증가율	0.9%(¹²)→1.6%(¹³)→2.1%(¹⁴)	2.3%(¹²)→3.0%(¹³)→3.3%(¹⁴)
소비의 GDP비중	46.5%	50.6%
제조업의 부가가치비중	33.4%	38.7%
제조업의 취업자비중	28.2%	23.6%
실업률	7.9%	3.3%
고용률	74%	64%
재정적자 GDP비중	-2.2%	+0.5%
공공부채 GDP비중	40.2%	37.2%
경상수지 흑자	\$32.5 (billion)	\$79.0 (billion)
주요수출품	기계, 車, 철강, 화학, 펄프, 종이	반도체, 휴대폰, 車, 컴퓨터, 가전, 철강, 조선, 석유화학
주요수출국	독일,노르웨이,핀란드,덴마크,영국	중국,미국,일본,홍콩

자료 : CIA, 'World Fact Book', 2015년 4월말 다운로드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resources/the-world-factbook/>).